“반도체 호황에 내년 경제 3.8% 성장”… 자영업·건설업 부진

금융연구원, 2027 경제 전망
수출 호조·설비투자 확대 성장 견인
AI 투자 확대에 세계경제 반등 기대
자영업 부진·건설투자 회복은 지연
물가·금리 부담에 경기 회복 불균형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왼쪽부터),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권효성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김영주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전망부장, 임홍기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세계경제는 거듭된 충격에도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며,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투자와 혁신이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고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과 통상 마찰,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도 여전하다. 주요국의 재정악화 취약성과 높은 장기금리, AI 투자에 대한 기대와 실제와의 괴리가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가능성도 크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KIF) 원장은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2027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 보호무역주의와 에너지·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이 다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제, 금융 전망을 진단·분석하고, 금융업권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항용 원장은 “특정 산업과 수출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앞으로도 성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물가와 금융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술 발전의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업권도 한국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태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027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에 기반해 주요국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원·달러 환율과 금리, 수출 등 한국 경제의 전망을 제시했다.

김현태 실장은 “2027년의 세계경제는 전쟁과 금리 상승 등 하방요인에도 에너지 공급망 재구축과 AI 관련 투자를 바탕으로 2026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국과 중국은 주로 AI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관련한 투자가, 유로지역은 에너지 가격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일본은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와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흑자에 기인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라며 “정부도 반도체 호조에 따른 추가세수분을 재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실질 GDP 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3.8%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별 전망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에도 자영업 부문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건설업권의 경기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실장은 “원재료비와 임차료 등 영업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새로운 비용 요인도 더해지면서 자영업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라며 “개인사업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정된 내수시장에서의 자영업자 간 경쟁이 금융취약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도 건설투자 회복세는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등 건설공사비 급등이 공사 진행의 지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설비투자는 AI 관련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빠른 증가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그는 “내년도 세계경제는 AI 관련 투자와 공급차질 완화에 반등하겠지만, 국가별 회복속도는 비대칭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AI 관련 투자가 세계경기를 지지하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변화와 금융여건의 변화가 글로벌 성장동력의 지속성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점차 내수로 파급되는 가운데서도 성장의 수혜와 물가·금리 부담이 업종과 가계별로 불균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견조한 성장세와 취약부문의 부진이 공존하는 가운데 물가압력이 지속되는 만큼,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을 함께 도모해야 하는 정책운용의 어려움이 커진 국면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美 정치 지형 바뀌어도 관세 압박 여전”… 대미 통상전략 새판 짜야

대한상의, 통상 전략 재정비 촉구
관세 협상·대미 투자 전략 점검
美 의회·주정부 소통 채널 확대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편의점 앞 가판대에 전날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대승했다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진열돼 있다.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재편됐지만 미국 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는 통상 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투자, 입법이 맞물려 움직이는 만큼 단계별 관세 협상과 투자 우선순위 재점검, 의회·주정부와의 소통 확대 등 대미 통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관세·투자·입법을 별개 현안이 아닌 서로 맞물린 3대 변수로 지목하고 정부와 기업이 대미 통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3대 변수 가운데 관세 분야에서는 301조와 232조를 앞세운 미국의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한 채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실익 중심의 접근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역법 301조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을 예시 목록에 올렸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산 중간재·설비의 기여를 근거로 의견을 내고 협상 단계에서는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발효일과 기존 관세 중복 부과 여부 등 통관지침을 세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32조에서도 미국 정부는 최근 로봇·산업기계, 풍력터빈 등에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180일의 협상 기간을 두고 미국 내 투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관세율보다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기준으로 품목별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예외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서두르는 행정부와 달리,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현지 고용과 공급망 기여도 등 투자 성과 검증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6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을 감독할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며 한국의 3500억달러(약 470조원) 투자 약정도 언급했다.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의 검증망이 촘촘해지는 만큼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전략적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 강점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국내 중소·중견 협력사의 동반 참여 기회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대한상의는 상원 토론 종결과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요건을 고려할 때 실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대신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조달 기준 변화 등이 한국 주력 산업의 미국 내 수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경제계의 대미 소통 채널을 행정부 중심에서 입법을 주도하는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로 넓히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16년 만에 주지사 과반을 차지한 만큼 데이터센터·생산시설 인허가 권한을 쥔 주정부와 지역사회로도 협의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젠슨 황 스파이 의혹 파장”… AI 반도체 공급·투자 차질 우려

황 CEO 중심 경영체계 리스크 부각
GPU 공급·데이터센터 투자 변수
국내 기업 AI 사업에도 부담 우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둘러싼 중국 스파이 연계 의혹이 경영 불확실성으로 확산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국내 기업들의 AI 사업에도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10일 엔비디아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지난8일(현지시간) 황 CEO가 외국 정보기관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독립조사에 착수했다. 황 CEO는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과의 혼외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사회는 다만 국가안보나 회사 기밀이 침해됐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며 황 CEO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업체 메가스피드의 전직 임원으로, 미국 정보당국은 그가 중국 정보기관에 첨단 반도체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왔다. 미 하원도 황 CEO에게 오는 18일 비공개 설명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실제 기술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젠슨 황에 집중된 경영체계… 美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 변수

이번 사태로 황 CEO에게 경영 의사결정이 집중된 엔비디아의 조직 구조도 위험요인으로 부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60명 이상의 임원이 황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공개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도 없다.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과 글로벌 고객사 협력에서 황 CEO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경영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요 사업의 의사결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엔비디아의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AI 업계의 GPU 공급과 인프라 투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는 동시에 AI 클라우드 기업과 데이터센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왔다.

올해 초에는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CoreWeave)에 20억달러(약 2조7000억원)를 추가 투자하며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을 강화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과 AI 인프라 투자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경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은행과 투자자들이 AI 인프라 기업의 현금흐름과 계약 조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차입 의존도가 높은 클라우드 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데이터센터 증설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금융권의 심사 강화는 이번 스캔들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으로, 현재까지 황 CEO 의혹으로 데이터센터 투자가 취소되거나 엔비디아의 반도체 공급이 중단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변수다. 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는 첨단 AI 칩 수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AI 오버워치법’과 반도체의 해외 이동을 추적하는 ‘칩 보안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